

영산강 정비 수도권 잔치?

국토부 경쟁입찰, 지역 건설업체 참여 막혀

건설협 전남도회 구조개선 건의키로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정비사업이 지역 건설업체에 소외된 채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만의 '잔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8일 570여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불합리한 사업추진 구조 개선 및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전남도회는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대규모 국가 사업으로 영산강 정비사업만 하더라도 총 사업비가 1조6천억원에 이르러 국가계약법 시행령(21조 1항 6호)에 따른 '지역 제한 대상 공사(50억원 미만)'나 '지역외무공공도급 공사(74억원 미만)'에 적용되지

않아 지역 업체의 참여가 대폭 축소된 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영산강 정비사업에 따라 최근 발주한 '영산강 생태하천 조성공사', '영산강 뚝담제 외 3개소 보강공사'의 경우 사업비가 각각 352억원, 223억원에 달해 '지역 제한 공사', '지역외무공공도급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 자금력과 기술력이 풍부한 수도권 대형 건설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영세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참여할 길은 사실상 막혀 있다는 것.

그나마 탄기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수도권 업체들이 낙찰받은 뒤 공사 자재까지 수도권에서 실어나를 수 있어 지역업체들은 '찬밥'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건설협회 전남도회 등은 정부가 이미 밝힌 공공공사 지역제한 기준 상향 조정 등 지역건설업 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국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방안

- 4대강 정비사업 예산 지자체에 배정해 지자체 발주 통한 지역중소업체 일정비율이상 참여.
- 발주전 지역중소업체 주주지원을 위한 입찰제도 정비.
-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지역제한 대상공사 확대의 조속한 시행. (·국가공사:50억원미만→74억원미만 ·공공기관:50억원미만→150억원미만 ·지자체:70억원미만→150억원미만)
- 지역외무공공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상향. (30%이내→49%이상)
- 발주규모의 적정화. (분할발주)

발주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율을 30% 이내→49% 이내로 확대 조정 ▲사업 규모를 분할해 지역업체 참여율 상향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가능한 방향으로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필기자 dok2000@kwangju.co.kr



설 대목 한라봉 출하 설을 20여일 앞둔 8일 광주시 남구 구소동 도덕마을 한 시설 하우스에서 한라봉 출하가 한창이다. 한라봉 1박스(8개·3kg)당 3만원에 출하되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기업 구조조정 속도 낸다

채권금융조정위 출범... 본격 활동

채권단간 자금 분담 등 이견 조율

건설과 조선업에서 시작된 정부의 구조조정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조율할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까지 출범해 정부의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는 8일 위원장에 김병주 서강대 교수와 7명의 조정위원을 새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정위원회는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 금융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고 채권단의 결정을 불복하는 채권자가 채권 매수를 청구하면 매입 가격과 조건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채권단의 의견 불일치로 위

크아웃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할 경우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견을 거쳐 조정의견을 내도록 돼 있어 향후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과 조선업체를 시작으로 구조조정에 나선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의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8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단기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한계기업과 자생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기업은 구조조정도 병행해 자금이 적체적소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필수기자 bungy@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예고도 흘러 나오고 있다.

정부는 유동성 악화설이 나오는 일부 대기업의 현황을 조사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지원하되 필요할 경우 채권은행을 통한 보유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금은 과거 IMF 구제금융때와 달리 대기업들이 건설해 정부가 개입하는 구조조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의 경우 자금난이 알려지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당국의 구조조정이 기정사실화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일단 주채권 은행들이 기업들에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지원을 제시하는 방법이 우선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光銀 BIS비율 맞추기

'자본 확충 펀드' 신청

광주은행이 자본금 확충을 위해 이달 안에 '자본확충펀드'에 가입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8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가동할 예정인 자본확충펀드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펀드 가입규모는 3천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당국이 이달까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2%, 기본자기자본비율(Tier1·티어원)을 9%이상 맞추도록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은행의 BIS비율은 11.8%, 티어원 비율은 7.5% 수준으로 권고치에 미달된 상태다.

광주은행은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해 자본확충펀드로 매입함으로써 BIS비율과 티어원 비율을 권고치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우선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금 확충에 나서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펀드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노점상에 최대 500만원 신용 대출

다음주부터 붐어빵 아저씨, 요구르트 배달 아저씨 등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영세 자영업자들도 정부 보증 받아 최대 500만원까지 금융기관에서 담보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12일부터 전국 새마을금고를 통해 일제히 '금융지원

소외계층 특례 신용 보증'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노점상 및 행상을 포함한 무등록 사업자나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저신용 사업자가 새마을금고에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지역신보가 보증을 서 7일안에 다시 새마을금고를 통해 많게는 500만원까지 신용대출 해주

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이율 7.3%로 정해졌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은 없어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무등록이라도 점포가 있다면 임대차 서류를, 요구르트 배달원 등 개인용역 사업자는 용역계약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노점상·행상의 경우 장사해온 곳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받은 '확인서'도 인정되지만, 만약 이조차 없을 경우에는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동대문구 보청기) (02) 227-9940

충장점 (금남중로) (082) 227-9970

리첸 주방가구 광주직영전시장 OPEN

0622510-2972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신용보증 서비스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신용보증 서비스